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LO에서 개최한 2017 RDW(Regulating for Decent Work) 컨퍼런스의 주제는 ‘노동의 미래’였다. 이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기조강연 세션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기본소득이 미래의 노동세계에 조응하는 적절한 소득보장제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나누었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오셨던 Olli Kangas(핀란드 사회보험기구)와 Gerhard Bosch(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의 기고를 받아 이번 호 기획특집으로 신는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미래 노동세계에 두 가지 전에 없던 도전을 제기한다. 하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며,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자리의 확산이 고용의 단기성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좀 더 현실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문제이다. 일자리의 감소와 불안정성의 심화는 모두 기존의 복지국가가 구축한 소득보장체계인 사회보험제도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회보험은 기여(contribution)에 기반을 둔 권리성 소득보장제도인데, 기여할 근거가 되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수급권이 없어서 공공부조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결국, 굴욕적인 빈곤증명 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아무 일자리라도 일단 수용하라는 강압적인 활성화조치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이등시민이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의 빈곤증명 절차나 실업보험의 실업상태 증명 절차는 노동시장 참여

에 부정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널리 퍼지고 있다.

Olli Kangas의 글은 핀란드가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을 현실에서 제도화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실험을 시작하였다는 사정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핀란드가 현재 실험 중인 기본소득제도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제도’가 아니며 급여수준도 다른 기존 제도를 모두 대체할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약하게 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복지국가인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은 북유럽 복지국가를 부러워 시선으로 바라보던 우리로서는 조금은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 실험은 2018년 말까지 계속되는 것이므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느 쪽으로건 실험의 결과를 손에 받아들기까지는 아직은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실험결과가 나오기 이전이지만 이론적인 논쟁은 이미 불붙은 상태이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이론가들은 기본소득이 기존 소득보장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논리들이 오히려 더 취약하다는 점들을 지적한다. Gerhard Bosch의 글이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

기본소득론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실현가능성과 기본소득이 원칙적으로 추구하는 자유·인권 사이에 놓여 있다. 기본소득이 우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부인할 수 없는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낮은 금액에서 출발하여 가보자고 하면 효과가 미미해지고, 이걸 하자고 기존 제도들을 후퇴 내지 정체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아이디어를 들고 나오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이론가들은 없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때, 기본소득의 제도설계와 급여수준, 그리고 기존 복지국가 소득보장 제도의 어느 부분을 대체할 것인가를 두고 한 발씩 들어가다 보면 이 길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Gerhard Bosch도 기본소득의 일부 아이디어는

기존 복지국가 소득보장체계 내에 답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논리적으로 단단하지 않은 제도를 선불리 도입하다가 100여 년에 걸쳐 다듬어 온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체계를 훼손할까 우려하는 것이다.

독일식의 복지국가에 비교적 근접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 논쟁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근거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도 커다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LI**